

광복60년 종합학술대회 (제9차)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논쟁>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발행일 : 2005년 10월 26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사람나라 구상

최상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목 차 —

- I.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비전
- II. 사람나라의 구상

## I.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비전

### 근대화를 완성했다

한국의 해방 60년(1945~2005)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전(反轉)의 드라마였다.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이라는 가혹한 현실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인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냈고, 그 결과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 단 60년 사이에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시켰고, 시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는 민주국가를 성취했다.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 이처럼 산업화와 민주화 두 가치를 확실하게 이룩한 나라는 아직까지 한국뿐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한국은 엄청난 역사적 성공을 거둔 것이 확실하다.

한국이 이룬 이러한 변화를 총괄해서 근대화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한국은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적 근대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통해서 정치적 근대화를 이루으로써 명실상부한 근대국가, 즉 민주공화국을 성취했다. 그런 의미에서 1987년 시민항쟁과 6공화국의 탄생은 근대화의 완성이므로 평가할 수 있다.

유럽이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거쳐서 300년 걸려 이룬 근대화를 한국은 불과 40년 만에 이룬 셈이다. 초고속 근대화요 압축 근대화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기적 같은 근대화 성공은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사고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큰 변화는 역사의 반전이 아닌가 싶다. 한국인은 ‘타율의 역사’, ‘실패와 패망의 시대’를 마감하고 ‘자주적 역사’, ‘성공과 번영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책 없이 당한 임진왜란의 전화, 조선 후기의 자주적 근대화 실패, 일본의 식민지화,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 이데올로기 대결과 두 개의 분단국가 수립, 인구의 10% 이상이 죽은 6·25 전쟁, 40년 넘는 독재체제 등등. 최악의 역사를 연출했던 한국인이 이번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제3세계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런 역사의 반전은 단재 신채호가 말하는 일천년 이래의 일대 사건임에 틀림없다. 한국인은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러한 역사의 반전은 한국인의 몸과 마음에도 엄청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요즘 한국인의 모습은 실패와 패망과 독재의 시절에 살던 한국인의 모습이 아니다. 무표정하고 어두운 얼굴, 만나면 서열을 따지고 상대방이 어떤 인간인지 눈치 살피기에 바쁜 모습, 권력 앞에서 하인이 상전 대하듯 굽실대는 모습, 미국 앞에서 기죽는 태도, ‘북’과 ‘조선’과 ‘사회주의’와 ‘김일성’이라는 말만 나와도 공황 상태에 빠지는 반공 공포증, 이런 한국적 증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일본제국이 유포한 “조선 놈은 안 된다.”는 ‘조센징 심리’는 거의 극복 단계에 이르렀다. 점령국가 미국이 심어놓은 “미국 없으면 안 된다.”는 사대주의 정신도 수구적이라고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식민 모국 일본은 물론 점령 국가 미국에 대한 환상과 숭배도 거의 소멸 단계에 이른 것 같다. 미국을 더 이상 신화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위협한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인은 근대화 성공을 통해 비로소 자기중심성을 회복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한국인은 몰라보게 당당해졌다. 더 이상 권위주의를 용납하지도 않고 국가 권력을 겁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그 어떤 나라보다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한다. 강대국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다. 한국인은 미국의 눈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국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4강 외교와 노무현 대통령의 협력적 자주국방론이 그렇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남북평화협력 정책들과 동북아평화전략이 그렇다.

이렇게 본다면 근대화 성공은 한국인의 주체성 회복, 자신감 회복의 역사적 근원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성과 자신감의 회복은 이후 한국인과 한국 사회의 엄청난 폭발력으로 나타났다. 87년 근대화 성공 이후 18년을 돌이켜보면 그 폭발력을 확인할 수 있다. 월드컵 거리 응원, 반전 반미 평화시위, 노무현 정권 탄생, 한나라당의

탄핵 쿠데타 진압, 아시아를 강타한 한류 열풍 등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 누구를 위한 근대화였는가?

기적적인 ‘근대화 성공’을 이룬 한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둘 다 성공했다면 대부분 한국 사람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이런 ‘좋은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행동을 보이고 있다. 있는 사람은 떠나고, 젊은 사람은 안 낳고, 보통사람은 돈 바람이 났다.

한국인의 ‘조국 탈출’은 이미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매년 1만 명 이상 이민을 떠난다. 유학도 아주 많다. 작년도 1/4 분기 캐나다 유학생의 38%가 한국인이라고 한다. 압도적 1위다. 캐나다에서만 그런 게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1, 2등을 다룬다. 이들 유학생이 한국에 돌아올지 안 올지는 미지수다. 아무튼 이런 ‘준 탈출’이 20만 명 가까이 된다. 불법 외국 체류자도 많다. 작년 10월 초, 외교통상부는 불법 외국 체류자가 12만 7천명이라고 밝혔다. 탈출 통로를 미리 확보해두기 위한 원정 출산도 2003년에만 7천 명이 넘었다. 워낙 탈출 바람이 거세져서 요즘은 선진국, 후진국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북쪽 인민만 조국을 떠나는 게 아니다. 북에 탈북자가 있다면 남에는 탈남자가 있다. 이들이 다른 게 있다면 남쪽에서는 합법적으로 조국을 떠나고, 북쪽에서는 불법으로 조국을 등지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많이 탈출했는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모르겠다. 앞으로 어느 쪽이 더 많이 탈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남이나 북이나 조국 탈출 행렬이 멈출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출산을 저하 문제는 더 심각하다. 1960년에는 6.0명이던 것이,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 1990년 1.7명, 2000년 1.47명, 2001년 1.3명, 2002년 1.17명으로 수직강하하고 있다. 이런 출산율은 미국(2.01명), 프랑스(1.90명), 영국(1.64명)과는 비교도 안 되고, 출산율 최저라는 일본(2002년 1.32명)마저 제쳤다. 이런 낮은 출산이 계속된다면 2020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100년 후에는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될 것이라는 계산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런 전망도 비현실적이다. 이민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997년(1.54명) 이후 5년 사이에 출산율이 27.3%나 격감했다

는 사실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유례없는 출산율 곤두박질을 보고 뉴욕 타임즈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일이라고 했고, 유엔은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근대화였는가? 누구를 위한 산업화였고, 누구를 위한 민주화였는가? 내가 보기에 산업화는 재벌과 기득권층을 위한 잔치였고, 민주화도 이런 기득권 독점을 더 강화시켰을 뿐이다.

민주화의 덕을 본 사람은 많아도 10%를 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은 보통사람들이 하고, 이득은 가진 사람들이 챙겼다. 150조나 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재벌 그룹에다 들이부었다. 부실은 총수들이 내고, 그 비용은 '국민'이 댄 꼴이다.

70% 이상 보통사람들은 거리에서 고함치르고 팔 흔들 자유만 얻었을 뿐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에 시달리고, 노동자의 60%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농업인은 시장 개방에 휘둘리고, 400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평균 가계부채가 3천만 원을 넘었고 총규모는 500조에 육박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민주화였는가? 재벌 중심, 기득권 중심의 산업화가 만들어낸 '10%를 위한 근대화'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악화시켰다. '1%를 위한 민주화'라고 비판을 해도 변명할 길이 없을 것 같다. 5대 재벌, 서울대학교, 톱스타들만 민주화의 덕을 확실하게 본 것 같다. 한국형 민주주의는 1등이 싸늘이 하는 제도인가?

민주화 18년은 자유화에 맴돌았고 그 결과는 양극화와 민중의 파산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년에 1만 2천 명이 자살하고, 3천 명이 산재로 숨지고, 5만 명이 실종되고, 그 중에서 1만 명은 돌아오지도 않는다.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다. 오직 국가경쟁력, 초일류, 무한경쟁 타령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최고고 사람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돈나라에서 돈에 안 미치면 오히려 이상하다. 챙겨야 할 것은 오직 세 가지, 건강, 가족, 돈이다. 그래서 웰빙 열풍과 10억 만들기 광풍이 미친 듯이 불고 있는 것이다. 나와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은 건강과 돈뿐이니까.

대한민국에는 돈 외에는 나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줄 안전판이 없다. 복지비용이 OECD 30개 국가 중에서 꼴찌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의 1/4, 복지 낙제 국가 미국과 일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한국은 제대로 된 국가보장도, 사회보장도, 직장보장도 없다. 있는 건 가족보장 뿐이다.

없는 사람은 죽을 맛이다. 돈 벌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 드는 돈은 늘어만 간다. 먹

고살기도 어려운데 사교육비까지 짓누른다.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면 골이 빠근하다.

이런 나라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책은 세 가지다. 첫째는 안전이 보장되는 좋은 나라로 떠나는 것, 둘째는 고생과 불안을 자기 대에서 그치기 위해 자식을 안 낳는 것, 셋째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10억 정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갈수록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 지금의 현실만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데, 당신의 아이가 초고령 사회의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도 조국을 지키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서너 명의 아이를 낳겠는가?

한국인의 행동 경향으로 볼 때, 떠나기와 안 낳기가 10년 정도만 더 계속되어도 엄청난 사태가 올 것 같다. 출산 거부는 더욱 강렬해지고, 무조건 뜨고 보자는 분위기가 휩쓸 것 같다. 60년대와 70년대에 도시로, 서울로 향했던 농촌 탈출을 상기해 보시라. 구름처럼 몰려드는 아파트 청약 열기와 로토 열풍을 기억해 보시라.

앞으로 10년 안에 사람들의 안전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그 무엇으로도 무조건 떠나기와 무작정 안 낳기를 막을 길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2050년까지 갈 것도 없이 2030년이면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인구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집집마다 노인이 넘쳐나고, 종일토록 아이 우는 소리는 들을 수도 없고……. 지금의 농촌 모습, 그것이 2030년의 대한민국일 것이다.

이런 노인국가를 벗어나는 길은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을 대 이민국(移民國)으로 전환시키는 길뿐인데, 그것도 쉬운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이웃의 임대아파트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통행로마저 막아버리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생활화된 나라에 살고 있다. 이런 한국인이 이민 온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을까?

## 새로운 비전의 필요하다

2005년 현재,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가 비전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근대화 성공을 이루었지만 대부분 보통사람들이 겪는 삶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제3세계보다도 더 심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근대화 이전보다 더 힘들고 불안하다고 할 수도 있다.

산업사회로 옮겨오면서 질병, 사고, 실직, 소송 등 개인과 가족을 파괴하는 위험 요소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나 불행을 막아주고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

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만나면 사회로부터 탈락할 수밖에 없다.

한번 낙오하면 사회로 복귀하기도 어렵다. 당사자만이 아니고 가난과 신분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농업사회와 달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적응하기에 한국 사회의 문턱은 너무 높다. 교육조차 너무나 많은 선행학습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자나 고학력 부모의 자식도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어렵다. 약자들은 몸으로 때우는 도리밖에 없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건 옛날 얘기다. 개천은 말라버렸다.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도 없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선은 독재정권이 주도한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후발 산업화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인지는 모르지만, 독재정권은 대규모 자본 축적과 집중을 위해 재벌 몰아주기와 민중 탄압을 산업화 전략으로 선택했다. 이런 재벌 몰아주기는 독재정권의 정치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도 아주 유용했다.

독재정권의 산업화는 철저하게 국가 주도, 대자본 중심, 조폭적 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산업화 전략은 짧은 기간에 재벌이 대규모 자본을 축적하여 중화학공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체제를 고도화하는 데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컸다. 독재정권이 경제를 총 지휘·감독하면서 정경유착이 고질화되고, 경제의 합리성과 윤리성을 죽여 버렸다. 권력에 줄 대기와 일상적인 부패로 인하여 건전한 시장경제조차 이루지 못했다. 총수 1인이 전횡을 일삼은 조폭적 기업문화도 만들어냈는데, 박정희의 천황제적 독재체제와 같은 유형이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가 국가를 사유화하고 국가 위에 군림했듯이, 재벌 총수들은 그룹 회사들을 사적으로 지배하고 그룹 위에 군림했다. 이런 천황적인 그룹 지배는 지금도 여전하다. 2~3%의 주식만 가지고도 혼자서 그룹을 지배한다.

민주화 정권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민주화 정권의 경제노선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선언 이후에 기본적인 틀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아주 거칠게 말해서 정치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고, 경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다는 것이 기본노선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치는 1인 1표 제도로 하고, 경제는 1주 1표 제도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정치는 민주주의 원리로 운영하고, 경제는 자유주의 또는 자유시장 원리에 기초한다는 정경분리 원칙에 기초한다. 이런 기본노선에 따라 민주화 이후 경제시스템도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정경유착과 부패와 탈법을

청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가 주도의 조폭적 자원배분 방식이 많이 사라졌고 그에 따라 시장경제도 상당히 회복했다.

그러나 자유시장 원리는 독재정권 시절의 경제운용 방식을 바꾸었을 뿐 경제구조는 오히려 악화시켰다. 자유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실업→영세자영업→파산>이라는 파산 경로를 넓게 열어 놓았다. 사회보장제도 없는 자유시장은 경쟁력을 빌미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낸다. 비정규직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도 바쁘다. 노후 설계도 자녀 교육투자도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걸고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경제활동 인구의 1/3을 넘는다. 선진국에서는 10% 정도인데 30%가 넘는 자영업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자본력과 노하우를 겸비하지 못한 대다수 자영업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

자유시장 원리를 계속한다면 양극화는 막을 길이 없고 대다수 보통사람들의 경제주권도 부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한국인을 경제적 노예로 만들 수도 있다. 1인 1표 제도가 적용되는 정치영역에서는 모두가 주권자이지만, 1주 1표 제도가 적용되는 경제영역에서는 90% 이상이 주권이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자본독재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은 과장된 말도 언론의 말장난도 아니다.

좀 극단화하자면 민주화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를 재벌 주도 자본주의로 바꾸어 놓았을 뿐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노동자와 민중은 독재시절보다 더 고달프다. 독재국가는 자본도 통제하지만 민중도 일정하게 보호한다. 민중 보호는 독재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민주정권은 홀로서기를 강요할 뿐 '자유'의 이름으로 민중을 내팽개친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두 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돈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독재체제에 대한 향수다. 앞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로또 열풍을 비롯한 돈 바람이고, 뒤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박정희 향수다. 이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는 심리적 바탕은 삶의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산업화를 통해서 선진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고, 민주화를 통해서 시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헌정체제도 확보하였다. 즉 근대국가의 규범과 토대를 구축했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인은 가난했던 시절, 독재정권이 지배하던 시절보다 사는 게 더 힘들다. 언제 어떻게 무한경쟁체제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 한국 사



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의 안전과 미래가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비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더 이상 비전 구실을 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질 것인가? 1960~1970년대의 산업화 비전, 1970~1980년대의 민주화 비전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인의 역량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무엇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하는가?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는 민족통일의 실현인가?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서 5대 경제대국이 되는 것인가? 복지화를 통한 유럽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인가? 민족통일 실현, 경제대국 실현, 복지사회 실현, 이 세 가지가 우선 떠오른다. 나는 미국식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유럽식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인본주의 또는 인본민주주의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다.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는 인본화가 문제 해결과 새로운 발전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II. 사람나라의 구상

자본주의가 해체되고 있다.

오늘날처럼 자본주의가 위력적인 시기에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일반적인 얘기와는 달리, 지금 이 순간 자본주의는 쾌속항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지 않으려고 곡예비행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생산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이윤을 쫓아서 세계금융시장을 헤매고 있는 모습이 이런 현실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고민할 때이고, 인본주의가 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진화, 팽창하는 모습만 알고 있다. 자본주의의 파괴력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무너졌다. 비자본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침략 앞에서 추풍낙엽이었고, 그 어떤 저항세력도 자본주의 타파에 성공하지 못했다. 가장 강력한 도전자였던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운동도 자본주의의 위력을 꺾을 수는 없었다. 자본주의의 대립자로 나온 사회주의체제는 제대로 경쟁해 보지도 못하고 자체 모순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본주의를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지금의 추세는 그렇다. 약간의 파열음을 내고 있을 뿐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운동은 너무나 빈약하다.

자본주의 역사에는 후퇴와 패배가 없는 듯이 보인다. 특히 사회주의 몰락 이후 세계는 자본주의 일색으로 변했고 그 어디에도 자본주의를 막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사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완전히 다르다. 내가 보기에 사회주의가 몰락한 1980~1990년대 이후에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자본주의도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주의의 몰락은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진짜 자본주의'의 파산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마가 아니라 경쟁자였는데, 세련된 사적 자본주의는 살아남고 조악한 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는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몰락했다는 것이다.

무너진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나는 국가자본주의라는 견해에 동의한다. 국유제와 계획경제라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통해서 최고 권력과 공산당은 생산, 분배, 유통 세 분야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경제에 대한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경제전권(經濟全權)은 경제주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주권의 기반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국유제라는 소유권에 기초한다. 사유재산제에 기초하는 사적 자본주의와 원리가 같다. 이런 의미에서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한 서구의 자본주의를 사적 자본주의(이하 자본주의로 표현)라고 할 수 있고, 국유제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국가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유제와 계획경제를 매개로 해서 최고 권력은 경영자가 되고, 공산당은 자본가 집단이 되고, 인민은 노동자 집단이 되는 국가자본주의체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당=국가'가 유일 자본가 역할을 맡으면서 노동자와 인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본가보다 폭압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대부분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노동권이라는 개념도 없었다. 스탈린 시대에는 생선 한 판을 훔친 죄로 시베리아 유형 3년에 처해질 정도였다. 더구나 자본에 의한 경제적 지배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한 정신적 지배까지 가능했던 것은 '당=국가'가 유일자본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적 소유가 없는 조건에서는 개인의 독립성도 없고 권력과 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거의 불가능했다.

자본주의에서는 국가는 자본가 편을 들 수는 있어도 자본가 역할은 할 수 없다. 국가는 강력한 소유주체도 자본가도 아니다. 또 대부분 국가가 시민주권에 기초한 민주헌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정치영역에서는 자본가나 노동자는 형식적으로나마 평등하다. 개인이 소유권과 자본권의 통제 하에 들어가는 것은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국한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몰락은 '민주주의 없는 국가자본주의'의 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 문제의 핵심에는 국유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마르크스에 의하면 국유제는 사유재산제보다 더 조악한 사적 소유다. 사유재산은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의 산물이지만, 국유제는 폭력적 탈취의 결과인 것이다.

사회주의 몰락보다 더 의미심장한 변화는 자본의 성격과 기능 변화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본의 역사는 규모는 커지고 권력은 해체되는 과정이었다. 자본은 독재 권력으로 출발해서 요즘은 이윤을 얻기 위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돈 나방으로 전락했다.

자본권력의 해체 경향은 너무나 뚜렷하다. 맨체스터 자본주의에서 자본권력은 절대권력이었다. 자본가가 경영권을 완벽하게 독점했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커지고 주식회사체제로 바뀌면서 자본권력은 점차 경영권 일반에서 의사 결정권으로 축소되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후에는 의사 결정권마저 경영자 선임권으로 축소되었다. 경영권 일반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자본권력이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하에서는 주식회사체제마저 상당히 변질되었다. 회사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의사 결정이 기업평의회에 귀속됨으로써 주주 총회의 의사결정권도 상당히 축소되었고, 기업의 성격도 애매모호하게 되었다. 이해 당사자의 의사 결정 참여가 보장되고 기업의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주식회사라기보다 노자공동회사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자본 집적체에서 일종의 생산 공동체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권력의 해체보다 더 중대한 변화는 자본의 생산 주도성 상실이다. 산업사회에서 자본은 생산을 주도하는 힘이었다. 기계제 생산방식에서 자본은 기계와 동력을 구입하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조직하는 힘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본이 생산 주도성을 잃어버렸다. 생산 주도성이 자본에서 지식과 기술로 넘어 가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전형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소액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불과 20년 만에 세계 정상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에 컴퓨터 업계의 슈퍼 캐피탈이던 IBM은 파산 직전까지 갔다 겨우 살아났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 GM의 위기와 삼성전자의 도약도 자본력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소유 여부였다. 지식·기술의 생산 주도성은 갈수록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

기계제 생산에서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자본이 가장 큰 힘이였다. 이 시기에 자본은 권력이었다. 그런데 컴퓨터 제어시스템이 개발되고 새로운 지식이 생산에 적극 도입되면서 사태는 급변했다. 신지식은 신기술과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창출했다. 그리고 신지식, 신기술의 개발 속도는 갈수록 빨라졌다.

생산시스템도 진지전 방식에서 기동전 방식으로 바뀌어 갔다. 고객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곧바로 밀린다. 이런 생산방식에서 기계는 중요하지 않다. 신지식, 신기술을 가지지 못하면 자본은 휴지에 불과하고 기계는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산 주도성을 잃으면서 자본은 더 이상 권력일 수도 없고 의사 결정권을 가지기도 어렵게 되었다. 자본가라고 특별히 생산지식이나 신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니 기업 경영에 나설 수도 없다. 이럴 경우 유일한 관심은 이윤이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 투자회사가 국제 자본시장을 쫓아다닌다.

자본은 더 이상 기업을 책임질 수도 없다. 생산 주도성도 잃었지만 생산자본에서 투기자본으로 바뀌면서 자본의 기업에 대한 관심은 오직 이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GM에 투자했다가 오늘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방랑자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주식회사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다. 이런 현실에서 자본가가 더 이상 기업의 주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기업을 지키고 발전시킬 새로운 주인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해체되어 가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다. 우선 국가 영역은 이미 상당히 민주화가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자본주의가 부활하거나 국가가 자본가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사회 영역에서도 소유권보다는 인권이 강화되는 추세다. 경제 영역에서도 자본주의는 엄청난 변화를 거듭했고 지금도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요즘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이를 수 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괴물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는 그럴 수 있어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그리기가 무척 어려운 모양이다.

안 잡히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그리려고 헛수고하느니 자본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

## 사람나라의 기본 틀

시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국가에는 시민주권을 떠받치는 두 가지 기본적 권리가 있다. 재산권과 인권이다. 시민 즉 주권자는 재산권과 인권을 가진 존재이고, 국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재산권과 인권은 개인의 사회적 독립성을 지켜주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민(주권자)의 규범적 기반이다. 둘 중 어느 한 가지가 없어도 개인의 독립은 불가능하고 주권자 지위도 확보할 수 없다.

사유재산권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사유재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수익을 위해 투자되는 재산이 자본이고, 자본 활동에 따르는 권리들을 자본권이라고 한다. 인권은 사회권이라고도 하는데,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권, 공직 담임권, 선거권·피선거권을 포함하는 정치권,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 직업을 가지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권 등등이 중요한데 인권 의식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인권이 법제화 되는 경향이 있다.

재산권과 인권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양대 권리이면서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충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두 권리는 상극에 가깝다. 부자와 빈자의 갈등, 자본권과 노동권의 대결은 그런 충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양자의 충돌은 대체로 재산권의 축소, 인권의 확대로 결말이 났다. 예를 들자면 프랑스 혁명 직후에는 일정한 수준의 세금을 내는 부자들만 투표권을 가졌다. 재산권이 정치권을 압도했다는 얘기가 된다. 근대 초기에 사유재산권은 신성불가침한 권리였고, 인권은 자유권 중에서도 초보적인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었을 뿐이다. 그러던 것이 자유권이 엄청나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권들이 속속 생겨났다. 환경권, 일조권, 알권리 등등이 그런 예다.

사유재산권과 인권은 민주국가의 두 축이다. 그러나 양자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체제를 만들어 낸다. 현실 속에는 두 형태가 있고 한 가지 형태는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본주의 또는 인본민주주의다.

미국형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과 자본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융합한 정치경제체제인데, 재산권이 인권의 우위에 있다. 사회민주

주의는 자본권과 노동권의 대등한 협력을 보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융합한 정치경제체제인데, 재산권과 인권, 자본권과 노동권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인본주의는 인권과 노동권이 재산권과 자본권의 우위에 있는 정치경제체제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런 정치경제체제를 ‘사람나라’라고 부르기로 하자.

아주 단순화 하자면 자본주의는 재산권과 자본권 중심체제이고, 사람나라는 인권과 노동권 중심의 체제다. 자본주의는 물질과 자본이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이고, 인본주의는 사람이 물질과 자본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사람나라는 결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지 않는다. 사유재산제도는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물질적 기반이다. 따라서 사람나라의 필수품이다. 다만 사유재산이 사람을 수단화하고 노예화하는 길을 봉쇄하고, 재산을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자본을 생산수단으로 만들고자 할 뿐이다. 이것은 사람이 주인이고 물질과 자본이 수단이 되는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원시반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원시반본을 통해서 전통적인 위민국가와 경제제민의 원리를 한 차원 높게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 인본국가와 사람안보시스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엄청난 차별을 받는다. 같은 ‘국민’인데도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여자는 없다.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느라 2년 이상 시간 손해를 보고 힘든 군대생활을 감내해야 한다. 다 같은 국민인데 이런 차별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성차별만 있는 게 아니다. 남자 중에서도 예외가 있다. 스포츠 선수나 바둑 기사 중에서 세계대회에서 우승해서 국가를 빛낸 사람도 의무가 면제된다. 여기다가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까지 면제되고 나면, 군대는 ‘어둠의 자식들’만 가는 곳이란 말이 맞는 말이 된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에는 차별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국민의 의무’라고 해 놓고 남자한테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건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남자의 의무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일까?

한국인의 건전한 상식 중에는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게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들 4대 의무 중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특별히 강조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부른다.

사람나라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이 상식부터

폐기처분해야 한다. 헌법 조항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납세, 근로, 국방의 의무는 왕조 시대 백성(공민)이 주권자인 왕에게 바치는 의무다.

왕조시대에는 모든 땅은 왕토로, 모든 인민은 왕의 백성(공민)으로 규정되었다. 이런 왕조체제 하에서는 사유지도 왕의 것처럼 분식되는데, 왕은 토지를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각종 의무를 지웠다. 왕에게 바쳐야 할 의무는 네 가지인데 조용조(租庸調)와 군역이다. 즉 왕토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대가로 내는 납세의 의무인 조와 공납, 근로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부역 그리고 국방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군역을 졌다. 백성은 이런 역(役)의 부과 대상, 요즘 말로 해서 의무의 담지자였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아직도 왕조시대의 역 개념을 적용해서 병역이라고 부른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왕조시대 ‘백성의 의무’를 벗어난 것은 교육의 의무인데 이것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육이 정말 ‘국민의 의무’라면 국가에서 대학까지 공짜로 시켜줘야 당연하다. 지금 그러고 있는가? ‘의무교육 9년’이라는 말도 옳지 않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국가의무 교육’이라고 한다면 타당하지만, 의무교육이 국민강제교육이 되면 곤란하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제 식민지 시기 천황체제의 용어나 제도를 쓰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것도 그렇다. 이 말이 사실은 ‘황국신민(국민)의 4대 의무’라는 뜻이고, 왕조시대의 ‘백성의 의무’에다 황국신민교육까지 포함해서 천황체제에 맞게 의무체계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의무’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나라사람은 의무의 담지자가 아니라 교육권과 노동권을 가진 주권자다. 납세의 의무라는 말도 옳지 않다. 납세가 진짜 의무라면 면세점 이용 국민은 모두 감옥에 보내야 마땅하다. 납세는 수익에 따라서 국가재정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제체제의 하나일 뿐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일본군국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안보주의에 그대로 이용되었다. 국가안보주의는 국가가 나라사람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라사람이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다. 국가안보주의 하에서는 나라사람은 주권자가 아니라 국가의 군사동원 대상이 되고, 사병집단처럼 지휘대상이 된다. 국가안보주의가 요구하는 가치관은 애국주의다. 군대에서 지휘관에게 집단 경례를 할 때 ‘충성’이라고 외치는 것은 애국주의 가치관이 의례화한 것이다.

사람나라는 인본국가를 추구한다. 인본국가는 국가의 존재 목적을 나라사람의 안전과 자유로운 활동 보장으로 설정하고, 사람안보시스템을 국가체제의 기반으로 삼는다.

사람안보시스템 하에서는 국가안보도 사람안보의 한 방법일 뿐이다.

일본국가의 사람안보시스템은 국가안보시스템과는 정반대의 개념과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람안보시스템이 군대나 행정체제와 전혀 다른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구체적인 제도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람안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해야 할 사업이 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사업이다. 어디가 아프고 무엇이 불안한지 아는 것이 사람안보의 첫걸음이다.

## 인본사회와 홀로서기 지원시스템

인류사는 분화와 통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작은 영역을 점유하고 있던 씨족, 부족이라는 집단적 존재에서 분화와 통합을 계속해왔다. 국가시대(nationalism)에 이르면 한편으로는 동질적 집단이 신분과 계급으로 분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분과 계급은 국가로 통합되었다. 최근에는 국가시대를 넘어서면서 한편으로는 국가, 신분, 계급으로부터 개인이 분화되어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를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화 추세는 세계화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한국이 특히 그렇다. 한두 명의 자녀, 대학 진학의 일반화, 인터넷과 휴대폰이라는 개인 주체의 소통 체계 발달, 스타와 개인송배,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 경향, 몸의 발견과 철저한 자기관리 경향 등등 개인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성형바람과 웰빙 열풍도 이런 개인화 추세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면에서는 한국이 가장 앞서서 있는 것 같다.

개인화는 교육과 더불어 지식문명시대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 같다. 지식문명시대 대응능력은 교육이 지식주입교육에서 지식생산교육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느냐, 건전한 개인화로 창의적인 개인, 합리적인 개인이 얼마나 양성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지식생산능력을 가진 훌륭한 개인을 많이 길러낼수록 미래가 밝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세계화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개인화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화에 비하면 개인화에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불균등 개인화를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개인에 기초한 이념이다. 개인을 독립적 인격체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는 의사결정과 권리주체로, 경제적으로는 노동과 소유의 주체로, 정치적으로는 주권자



로 설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회적 지원 없이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홀로서기에 성공해도 계속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남의 도움 없이는 그 누구도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가 없다. 부모와 사회의 도움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도움과 투자가 없으면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아이라도 홀로서기는커녕 제대로 언어를 습득할 수도 없을 것이다. 늑대인간이 이를 증명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개인의 홀로서기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과제를 가정에 맡겨버린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장래는 부모의 교육 수준과 재산 정도에 좌우되고, 결국 경제력과 계급이 대물림되어서 현대판 신분제도를 만들어 낸다.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도 현대판 신분제도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미국은 물론 유럽까지도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 민주화된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신분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홀로서기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람나라가 추구하는 인본사회는 홀로서기 지원시스템을 갖춘 사회체제를 말한다. 인본사회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 개인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의 수준에 맞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협력체제다.

홀로서기에는 대체로 세 가지 영역의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생물학적 홀로서기에 필요한 건강관리시스템, 사회적 홀로서기에 필요한 교육시스템, 경제적 홀로서기에 필요한 직업시스템이다. 개인들이 자기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고, 직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자는 것이다.

홀로서기 지원시스템은 복지제도와는 다르다. 복지제도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완해주는 사후적 조치인데 반해 홀로서기 지원시스템은 개인의 자기실현을 도와주는 사전 지원이다. 복지제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홀로서기 지원시스템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의 토대 또는 연대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홀로서기 지원시스템 구축에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것 같다. 어쩌면 조세로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의 생각으로는 사회적 상속이 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상속에 대해서는 자녀 상속과 사회적 상속을 병행하도록 제도화해서 연대자본을 축적하는 방법이다. 이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사람나라 구상에는 인본교육과 인본기업도 들어 있다. 인본교육은 '손잡고 홀로서기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고, 인본기업은 노자공동기업과 사원회사의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발표회 때 충분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